2026년도 3차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문제지

< 경위 공채(일반) 2교시 >

- [필수 1] 해양경찰학개론(01)
- [선택 2] 헌법(05), 범죄학(06), 행정법(07), 행정학(08)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응시자 유의사항
○ 본인의 응시분야, 계급, 과목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신속히 페이지를 넘겨 인쇄 상태 등 파본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문제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교체를 요구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 명 :	응 시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해양경찰학개론

1.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②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 제외) 국방부장관 또는 외교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항공기의 이함·착함 또는 탑재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④ 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2. 다음 중 「국가재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감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다음 중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기록의 제공
   ② 사람 또는 증거물의 인도
   ③ 증거 수집, 압수·수색 또는 검증
   ④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4.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을 말한다.
㉡ 행정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실질적 의미의 해양경찰에 해당한다.
㉢ 비상해양경찰은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계엄령 또는 위수령이 선포될 경우에 군대가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해양경찰의 수단적 이념으로는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등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 헌장 운영규칙」상 해양경찰 헌장 전문이다. 밑줄 친 부분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다.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 확립에 힘쓰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에 굳은 각오로 다음을 실천한다.
1. '바다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 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1. '정의의 실현자'로서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며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1. '국민의 봉사자'로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최고 수준의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1. '해양의 전문가'로서 ㉥창의적 자세와 도전 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임무를 완수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6. 다음 중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2월 23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해양재난구조대는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구난 활동의 지원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재난구조대원은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양재난구조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부장 및 반장은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7. 다음 중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 구역에 중첩되거나 2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세력이 동원된 경우에는 최초 상황이 발생한 해역을 관할로 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지휘한다.
② 긴급신고전화에 의한 상황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최초 신고를 받은 관할 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접수한다.
③ 해양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의 지휘는 관할 해양경찰서의 상황실장이 지정한 현장조정관(OSC)이 지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VHF-DSC 등 무선조난통신은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에서 접수한다.

8. 다음 <보기>는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상 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중앙방제대책본부 : 지속성 기름이 ( ) kℓ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광역방제대책본부 : 지속성 기름이 ( ) kℓ 이상 (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 ) kℓ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역방제대책본부 : 지속성 기름이 ( ) kℓ 이상 (비지속성 기름 또는 위험·유해물질은 ( ) kℓ 이상) 유출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800　② 860　③ 900　④ 960

9. 다음 <보기> 중 「해양경찰법」 및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상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해양경찰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3명 이상의 위원,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차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0. 다음 중 「해양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재난 또는 해양사고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양경찰법」상 국민참여의 확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안순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연안안전지킴이가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연안안전지킴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2. 다음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13. 다음 중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출국하려는 사람

②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④ 국세 및 관세 5천만원 이상 또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14. 다음 <보기>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중앙구조본부의 장은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 14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방법, 그 밖에 수난대비기본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훈련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자연적·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 조직을 말한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5. 다음 중 「해양경비법」상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선박등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함)

①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선박등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금지물품을 수송하는 행위

③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

④ 선박등이 항구·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항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6.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안전준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출발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상 인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8. 다음 중 「함정 운영관리 규칙」상 함정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좁은 수로를 통과하거나 제한된 시계에서 항해하는 경우에는 함·정장이 직접 조함해야 한다.
② 간첩선 출현 등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9조에 따른 함정 지휘권자는 함정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③ 함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반기별, 해양경찰서장 및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분기별 함정 운용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편제를 조정할 때에는 해역별 특성, 치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편제를 조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19. 다음 중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책임자"란 해당 해양경찰관서등의 무기·탄약 및 진압장비의 보관·운반·수리·입출고 등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간이무기고는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함정, 파출소 등 소속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탄약고를 무기고와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탄약을 반드시 별도의 상자에 넣어 잠금장치를 한 후 무기고에 보관해야 한다.
④ 공용화기는 유탄발사기, 중기관총, 함포(부대장비를 포함한다) 등 부서단위에서 운용하는 장비를 포함한다.

20. 다음 <보기> 중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등의 안전·치안수요가 증가되어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 파출소등 지원근무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및 근무지침은 파출소장이 정한다.
㉡ 순찰구조팀장은 파출소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안전·상황·구조부서에서 근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파출소장이 지정한다.
㉢ 해양경찰서장은 관내 안전·치안수요와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파출소의 교대근무제를 정할 수 있다.
㉣ 연안구조정은 임무수행을 위해 파출소등에 배치하며, 파출소장의 지시를 받아 순찰구조팀장이 운용한다.
㉤ 순찰근무는 파출소장 및 출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파출소 또는 출장소의 관내를 돌아다니는 근무로서, 해안순찰과 해상순찰로 구분하며, 주로 해상순찰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1. 다음 중 통합방위작전에 관하여 「통합방위법」 및 「해양경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비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통합방위법」보다 「해양경비법」이 우선한다.
②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작전의 해상 관할구역은 일반경비해역과 특정경비해역으로 구분하며, 일반경비해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특정경비해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담당한다.
③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지역군사령관 및 해군작전사령관은 관할구역 중에서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등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함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2. 다음 중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해양경찰청 : 감사담당관
② 지방해양경찰청 : 청문감사담당관
③ 중앙해양특수구조단 : 운영지원과장
④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 기획운영과장

23.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 조직의 발전과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간적인 순서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 「경찰법」의 제정
㉡ 「해양경비법」의 제정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의 국제적 발효
㉣ 해양경비대를 해양경비사령부로 개칭
㉤ 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이 차관급인 치안총감으로 승격

① ㉠-㉣-㉢-㉡-㉤
② ㉢-㉣-㉤-㉠-㉡
③ ㉣-㉢-㉠-㉡-㉤
④ ㉣-㉠-㉢-㉤-㉡

24.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상 경력동원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갑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 요원, 해양경찰 파출소 요원, 경비함정 요원은 가동경력 ( )%
㉡ 을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형사기동정 요원은 가동경력 ( )%, 해양경찰 파출소 요원, 경비함정 요원은 가동경력 ( )%

① 200　② 250　③ 270　④ 300

25.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와 상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④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없는 그 소속 상관에게는 증여할 수 있다.

26. 다음 <보기>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 )년마다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를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 )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67　② 65　③ 47　④ 45

27. 다음 <보기>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 보 기 >

- "내용연수"란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해양경찰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해양경찰장비의 (㉠) 사용연수를 말한다.
- "처분"이란 매각, (㉡) 등의 방법으로 해양경찰장비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기관에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
①	법적	양여
②	법적	증여
③	경제적	양여
④	경제적	증여

28. 다음 <보기> 중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내수의 통항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선박의 명세
㉡ 선원 및 화물 명세
㉢ 선박의 다음 목적지
㉣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 통항 위치 및 일정 등을 기재한 통항계획서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9.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이 법은 영해 및 내수 내의 관제수역에 있는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은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30.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어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국과의 협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를 내야 한다.
④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를 하여야 한다.

31. 다음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테러단체"란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③ 국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는 테러에 포함된다.
④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2.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② 해양오염방제업자 및 유창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지도
③ 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④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로 한정한다)

33. 다음 중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해역"이란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제항해선박·원양어선·해상구조물 또는 선원·승선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역으로서 제8조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해역을 말한다.

② 누구든지 해적행위등이 발생한 사실이나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 법은 위험해역을 통항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에도 적용된다.

④ 해상특수경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 다음 <보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사고발생의 보고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 보 기 >

•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경우 사고 장소가 내수면인 경우에는 사고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에게, 해수면인 경우에는 관할 (㉡)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사고의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①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②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③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④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35. 다음 중 「해양경비법」상 해양경비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에 관한 정보

② 해양시설, 임해 중요시설 등의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

③ 수심·조류·해양기상 등 해양 특성과 해저자원, 해양수산자원 등에 관한 정보

④ 선박등의 운항 및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선박등의 위치, 입항·출항, 승선원 및 화물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36. 다음 중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안전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유·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유·도선을 포함하여 모든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유·도선사업자는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유·도선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37. 다음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중레저사업자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는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8. 다음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상 근무성적을 평정하기 위한 평정요소 중 제2평정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실적

② 직무수행태도

③ 직무수행능력

④ 해양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39. 다음 중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름)

①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인 모든 여객선
②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항해선박
③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인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
④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인 이동식 해상구조물(천연가스 등 해저자원의 탐사·발굴 또는 채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40.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민간구조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구급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자가 그 구조·구급 활동으로 인하여 조난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구조·구급 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 활동 종사자 혹은 참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호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기술·제도·문화 등의 연구·개발·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를 설립한다.

헌법

1.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한다.
   ③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외국인으로만 처우한다.

2.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독자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헌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작성되어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한다.
   ③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북한의 의과대학은 국내 대학으로 인정된다.
   ④ 북한주민이 외국환거래의 당사자일 경우, 구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법률해석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4. 관습헌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습헌법의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회 의결 및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②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은 인정될 수 없다.
   ③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 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특정의 국가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 회부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④ 관습헌법의 요건은 성립요건일 뿐 아니라 효력유지 요건이다.

5. 저항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의 유무는 차치하고 저항권 행사로 국민이 자기의 권리·자유를 지킬 수 있다.

② 저항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③ 피고인들의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 행렬, 서명날인 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 운동은 저항권은 아니지만 시민불복종 운동에 해당하여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④ 저항권 행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 개개인이지만, 단체와 정당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6.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률 시행 당시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장차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②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친일재산을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국가의 소유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헌법 제13조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③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소급입법 시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우선시 되기도 한다.

7. 기본권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은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관적 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기본권의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권력에 대한 객관적 규범 내지 가치질서로서의 의미를 함께 가진다.

③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소극적 방어권의 의미가 있으므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기능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에는 이르지 못한다.

④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8. 기본권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설령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될 일정한 기본권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② 사회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외국인 근로자에까지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④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의 유형은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한다.

9.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것을 준강도로 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의 죄질을 강도와 등가로 평가할 수 없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 범죄와 형벌 간의 균형성과 최소성을 상실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②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은 입법자가 과도하게 높은 형벌에 의존하여 국가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말한다. 추징은 몰수에 갈음하는 사법처분이나 몰수와 같이 부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가형도 형의 일종이므로 주형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③ 완화된 수단이 있더라도 취해진 수단이 유효적절하며,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보다 완화된 수단이 있는 것만으로 최소침해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0.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② 국가가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한 나라의 제반여건과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법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입법부작위나 불완전한 입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배라고 할 수 없다.

11. 입법부작위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헌법상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명시적 헌법위임 또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입법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해당 입법의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해태(懈怠)함으로써, 해당 부작위에 의하여 직접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②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이 불완전한 경우 불완전한 입법이 아닌 입법부작위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시술을 막기 위해 문신시술을 위한 별도의 자격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의무가 있다.

④ 헌법은 국민 개개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탄핵청구권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해석상 이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2. 자기결정권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②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③ 정보주체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스스로 정당한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의 위임 없이도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후 자신의 시체가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 자신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이 작다고 볼 수 없다.

13.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준법서약서에 관한 규칙조항은 당해 수형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차별적 취급으로 평등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②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완화된 심사기준, 즉 차별기준 내지 방법의 합리성 여부가 헌법적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된다.

③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차별취급이 평등위반인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④ 지방의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하여 재임하는 것을 3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에 대한 차별적 취급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14.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율을 대중 골프장 등 다른 체육시설보다 높게 규정한 것은 현저히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등을 고려할 때 후기학교보다 먼저 특정한 재능이나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필요성은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반고와 같이 후기학교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③ 분묘를 발굴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피고가 국가인 경우에만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15.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형자를 장거리 호송하는 경우에는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포승이나 수갑 등 어느 하나의 보호장비만으로는 계호에 불충분할 수 있어 수갑 2개를 채우는 행위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② 징역형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작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징역형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공익이 더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③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정의를 함에 있어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1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② 행정절차에 구속된 사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헌법 제12조제4항이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

④ 「형사소송법」이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한 것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통하여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일 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17.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법률혼이 아닌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구조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②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④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8.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조치를 취함에 있어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

②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서 학생부 기록 등을 반영함이 없이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입시계획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학의 자율성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고졸 검정고시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를 퇴학한 이후 6개월 동안 고졸검정고시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④ 평일에 예비군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학생에게 학기 중 평일 수업을 들을 학습권을 포기하게 하고 예비군훈련을 받도록 하더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법률에 의한 생계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고, 여타 다른 법령에 의해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하게 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③ 국가가 행하는 생활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곧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금 지급 등 보훈혜택에 상이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은 평등원칙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본다.

20.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에서 직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전문(前文)과 제4조의 통일조항이다.

②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③ 민주주의 원리의 한 내용인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④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바,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에 있다.

21.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구「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② 근로의 권리는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이 근로의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③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근로자가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하여 노사 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성을 가진 기본권이라고 할 것이다.

④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

22.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②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③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였다.

④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는 환경권과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의무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23. 헌법해석 및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에 따를 때, 적용범위의 축소에 의한 한정적 위헌선언은 부분위헌결정이다.

②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語義)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

③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을 형사절차상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상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다.

④ 「군인사법」 제48조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함이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

24.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조직·지휘·참가 및 집회 장소와 시간의 선택 등이다.

④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활동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단체활동의 자유는 단체 외부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단체의 조직, 의사형성의 절차 등의 단체의 내부적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권리인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

25.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

② 입법자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실제 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평가, 법집행의 공익상 필요와 실효적 제재의 요청, 경쟁행위 규제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참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③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과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26.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지방자치제도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함께 시·군 및 구를 계속하여 존속하도록 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절차에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권에 해당하지만 대상지역 주민들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은 그 자체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하여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27. 다음 <보기> 중 기본권 경합 또는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학생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기본권으로서, 학교법인이 가지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상위기본권에 해당한다.

㉡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 및 수익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채권자의 재산권과 수익자의 재산권이 동일한 장에서 충돌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른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등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 흡연권과 혐연권의 관계처럼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어서 노동조합에 적극적 단결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곧바로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8.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군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는 없다.

② 대상법률이 형성법률인 경우 위헌성 판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규정인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잉금지 내지 비례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성법률이 그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관련 기본권이나 객관적 가치질서의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중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부분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병역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29.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의료인에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여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다.

②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 중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에 관한 부분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④ 행복추구권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0.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상 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으로서의 성질을 갖지만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③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그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④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서장이 곧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3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는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더 이상 사생활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②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은 변호사의 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은밀한 것으로 내밀한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변호사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③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조항은,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처벌하지만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2.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감청할 수 있다.

② 범죄 수사 목적을 이유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 중 하나로 정하는 인터넷회선 감청의 경우 그 집행단계나 집행 이후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관련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③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내용을 녹음·녹화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형사 법령 저촉 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공익은 미결수용자가 받게 되는 사익의 제한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

④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의 시정을 요구한 것은,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3.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음란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부분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표현의 내용과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된다.

④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 표명인 경우 허용될 수 있다.

34.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제2항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소액임차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민법」 조항에 따른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

④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5. 다음 <보기> 중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있는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중개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 접견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36.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기관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아무런 인원 제한도 없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아닌 공직시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뿐만 아니라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문제도 포함되나 여기서 더 나아가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 중의 하나이므로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최소 보장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④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므로 구 「경찰공무원법」에서 당연퇴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37.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선고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에 관한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한 구 「형법」 제70조제2항 조항은 벌금 미납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신체의 자유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도 신체의 안전성이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

④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 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조항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8.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정한 「국회법」 조항은 무책임한 청원서의 제출을 예방하여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청원인이 기대한 바에 미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 볼 수 있다.

④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청원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고, 종결처리하는 경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39.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상해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죄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③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④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0. 정당과 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이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②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 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으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선거권자의 국적이나 선거인의 의사능력 등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본질상 요청되는 사유에 의한 내재적 제한을 제외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선거권제한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권제한입법에 관한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④ 정당의 활동이란 정당 기관의 행위나 주요 정당 관계자, 당원 등의 행위로서 그 정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활동 일반을 의미하는데,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등은 비록 정당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헌법상으로는 정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므로 그들의 행위를 곧바로 정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

범죄학

1. 다음 <보기>의 설명이 나타내는 용어로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다른 유형의 피해가 두 번 이상 이어지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아동기 때, 그러나 동일한 발달단계 동안에 발생한다.

① 반복피해(Repeat Victimization)
② 재피해(Revictimization)
③ 복합피해(Poly-victimization)
④ 근접반복피해(Near-repeat Victimization)

2. 다음 <보기>의 반복 피해 관련 설명이 의미하는 것은?

< 보 기 >

○ 반복 피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특성이나 특징이 아니라, 피해 발생 중 및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피해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반복 피해자가 될 위험을 예측해 주는 것이다.

① 위험 이질성(Risk Heterogeneity)
② 상태 의존성(State Dependence)
③ 플래그 설명(Flag Explanation)
④ 위험 동질성(Risk Homogeneity)

3. 다음 범죄 연구설계 중 시간 차원에서 다른 하나는?

① 패널(Panel) 연구
② 횡단(Cross-sectional) 연구
③ 추세(Trend) 연구
④ 코호트(Cohort) 연구

4. 다음 중 무작위 표본추출방법이 아닌 것은?

① 할당(Quota) 표집
② 층화(Stratified) 표집
③ 집락(Cluster) 표집
④ 계통적(Systematic) 표집

5. 다음 <보기>가 의미하는 것은?

< 보 기 >

○ 어떤 경험적 측정이 고려하고 있는 개념(예, 공격성)의 의미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정도
○ 연구자가 측정하고 있다고 말하는 개념을 정말로 측정하고 있는지의 문제

① 신뢰도(Reliability)
② 정밀성(Precision)
③ 일관성(Consistency)
④ 타당도(Validity)

6. 다음 중 브랜팅햄과 파우스트(Brantingham & Faust) 등의 범죄예방모형에 의거한 '1차적 범죄예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상황적 범죄예방
② 환경설계
③ 민간경비
④ 이웃감시

7. 다음 <보기>의 무질서(Incivilities) 항목 중 '사회적 무질서' 지표의 개수는?

< 보 기 >

㉠ 거리의 홈리스들
㉡ 방치된 폐·공가
㉢ 길고양이들
㉣ 갱활동
㉤ 거리의 쓰레기
㉥ 손괴
㉦ 거리의 매춘부들
㉧ 거리의 낙서

① 2개
② 4개
③ 6개
④ 8개

8. 다음 중 아편계 천연마약이 아닌 것은?

① 모르핀
② 코데인
③ 코카인
④ 헤로인

9. 다음 중 샘슨과 라웁(Sampson & Laub)의 연령등급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람들이 범죄에 개입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 대신, 순응성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②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및 전환점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는 결혼과 경력이다.
③ 범죄 경력의 중단이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④ 50여년 전에 수집된 글룩(Glueck) 부부의 데이터에 과도하게 의존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10. 다음 중 범죄예측(Crime Prediction)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예측이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차후의 범죄개연성을 사전에 판별하는 활동이다.
② 버지스(Burgess)는 경험표라 불렀던 예측표를 작성하여 객관적인 범죄예측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③ 글룩(Glueck) 부부는 비행 및 정상 소년들을 대상으로 약 300개의 요인을 중심으로 조기 비행 예측표를 작성하였다.
④ 임상적 예측이란 자료(Data)를 통해서 알게 된 모수치를 근거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11. 다음 중 폭스와 레빈(Fox & Levin)이 분류한 연쇄살인범의 유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충동형(Incitement) 연쇄 살인범
② 스릴형(Thrill) 연쇄 살인범
③ 편의형(Expedience) 연쇄 살인범
④ 사명형(Mission) 연쇄 살인범

12. 다음 중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2009년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서 시행 중이다.
② 살인범죄의 미수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③ 선고형량을 정하는 기준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④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13. 다음 중 물리적 환경에 대한 범죄학(Environmental Criminology) 이론으로 분류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① 방어공간이론
② 범죄패턴이론
③ 범죄기하학이론
④ 차별교제이론

14. 다음 환경설계 범죄예방(CPTED)의 핵심 개념 중 샘슨(Sampson)이 말한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의 개념과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접근통제
② 활동의 지원
③ 영역성 강화
④ 자연적 감시

15. 다음 중 중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자가 되는 과정은 잠재적 범죄자가 관습적 가치를 중화하는 기술을 습득하고 비합법적 행동과 관습적 행동 사이에서 표류하는 학습과정이다.
② 범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적고,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경향이 있다.
③ 사이크스와 마차(Sykes & Matza)는 중화기술을 차별교재이론이 언급한 범죄와 비행에 '우호적인 정의'의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④ 에이커스(Akers)는 중화를 내적 억제의 약화나 사회에 대한 유대의 단절로 간주하여 통제이론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

16. 다음 중 일반긴장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긴장의 구조적, 거시적 영향요인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② 범죄성을 부정적 감정 상태의 간접적 결과로 본다.
③ 긴장의 핵심 원인은 목표와 수단 사이의 불일치에 있다.
④ 범죄율에 있어서의 성별 간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없다.

17. 다음 클라워드와 올린(Cloward & Ohlin)의 차별 기회이론이 분류한 갱 유형 중 소위 '이중적 실패자(Double Failure)'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범죄적 갱
② 갈등적 갱
③ 도피적 갱
④ 반역적 갱

18. 다음 신경전달물질 중 모피트(Moffitt)가 지칭한 '생애 지속형 범죄성향'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① 도파민
② 세로토닌
③ 모노아민 산화효소 A(MAOA)
④ 카테콜-O-메틸트랜스퍼라제(COMT)

19. 다음 중 범죄학자가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과 대표적인 범죄학 이론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합의적 시각 - 권력통제이론
② 갈등적 시각 - 일반긴장이론
③ 상호작용주의적 시각 - 낙인이론
④ 통합적 시각 - 정신역동이론

20. 다음 중 범죄학 이론과 그 정책적 함의의 연결이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사회해체이론 - 지역사회의 재조직화
② 낙인이론 - 비통합적 수치심 주기
③ 갈등이론 - 계급갈등 및 차별의 해소
④ 발달이론 - 조기 예방과 개입

21. 다음 중 에버딘스키(Abadinsky)가 주장한 조직범죄의 요소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비이념성 - 정치적 이념에 상관없이 오직 돈과 권력만을 목적으로 함
② 위계성 - 최소한 3개 이상의 지위로 구성된 수직적 권력구조를 가짐
③ 전문성 - 상급 조직원의 추천을 받거나 일정한 행동으로 자격이 증명된 사람만 구성원이 될 수 있음
④ 독점성 - 특정한 지역과 사업영역에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함

22. 다음 중 범죄 연구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범죄시계는 인구변화율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 가치가 적고, 일반인들에게 범죄경보기능을 하지 못한다.
② 미국의 표준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s)는 지표범죄(Index Crime)를 중심으로 상세한 정보를 보여준다.
③ 전체 범죄율은 중요범죄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④ 한국의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정보를 피해자에게 설문하여 수집하는 대표적인 공식 범죄통계 자료이다.

23. 다음 스티븐 섀퍼(Stephen Schafer)의 7가지 피해자 범주 중 '자기의 책임이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무관한 피해자
㉡ 도발적 피해자
㉢ 촉발적 피해자
㉣ 생물학적으로 약한 피해자
㉤ 사회적으로 약한 피해자
㉥ 자기 피해
㉦ 정치적 피해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4. 다음 중 페리(Ferri)가 범죄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분류한 범죄인 유형과 그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생래적 범죄인 - 사회와의 무기격리를 위해서 유형(流刑)이 필요하다.
② 격정범죄인 - 손해배상이나 강제이주가 바람직하다.
③ 상습범죄인 - 정신병원에 수용해야 한다.
④ 기회범죄인 - 중한 자는 농장이나 교도소에서 훈련치료를 시키고, 가벼운 자는 격정범죄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25. 다음 중 울프강과 페라쿠티(Wolfgang & Ferracuti)가 주장한 폭력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탈적 하위문화에 관한 규범은 한 사회의 중심적이고 지배적인 가치 체계와 동떨어져 있다.
② 하위문화에 속한 구성원은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
③ 일부 하위문화 집단에서 폭력은 관습과 규범에 의해 합법화된다.
④ 싸움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보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26. 다음 중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래의 형사정책이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취한다고 비판하고, 공동체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② 윌슨과 켈링(Wilson & Kelling)에 의하면 비공식적 통제가 공식적 통제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
③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질서위반 행위까지도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지역사회 차원에서 형사정책적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7. 다음 중 아노미 이론의 개념과 사회해체 모델의 개념을 결합하여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학자는?
① 블라우 부부(Judith Blau & Peter Blau)
② 패터슨(G. Patterson)
③ 엑스너(F. Exner)
④ 시겔(L. J. Siegel)

28. 다음 중 지능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든(Gordon)은 비행율의 변이는 지능지수의 변이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② 동작(Performance) 지능지수는 환경과의 비언어적 접촉의 정도와 구체적 상황에서 동작하는 역량의 정도를 측정한다.
③ 언어적(Verbal) 지능지수는 인간의 언어 이해력을 측정한다.
④ 비행청소년은 동작 지능지수가 언어적 지능지수보다 낮다.

29. 다음 셀던(Sheldon)이 분류한 신체 유형 중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 활기 없는 행동적 특성 때문에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작은 반면 장물 매매와 같이 신체적 힘이 요구되지 않는 범죄활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 내배엽형
② 중배엽형
③ 외배엽형
④ 혼합형

30. 다음 <보기> 중 쇼와 매케이(Shaw & Mckay)의 사회해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범죄는 하층계급의 도시 지역에서 작동하는 파괴적인 사회적 힘의 결과다.
㉡ 개인의 비정상적 요인이나 열등성은 범죄율과 관계가 거의 없다.
㉢ 범죄는 인종이나 민족의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빈곤지역의 일정한 속성이다.
㉣ 공동체 가치, 규범, 응집력이 개인의 행동 선택에 영향을 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1. 다음 중 티틀(Tittle)의 통제균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통제균형은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피통제와 그가 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통제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② “통제비율”이란 피통제량에 대비한 통제량의 크기를 말한다.
③ 통제량이 피통제량보다 클 경우 “통제과잉”이 된다.
④ “통제과잉”을 경험하는 사람은 굴종적·약탈적·저항적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32. 다음 중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볼드(Vold)는 집단이익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영역이 사법정책 부문이라고 보았다.
② 비판범죄학자들은 자본주의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리범죄에 초점을 맞추었다.
③ 터크(Turk)는 규범거부자들이 조직화되지 않고 교활한 경우에 갈등확률이 가장 낮다고 주장하였다.
④ 비판범죄학은 비범죄화와 다이버전을 범죄문제의 궁극적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33. 다음 중 뢰버(Loeber)의 3가지 비행발달경로에 대한 예시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명백한 경로 - 좀도둑질, 방화 행위, 사기
② 권위 갈등 경로 - 무단결석, 가출, 늦은 귀가
③ 계급 갈등 경로 - 불순종, 사보타주, 파괴 행위
④ 은밀한 경로 - 왕따, 갱 싸움, 강간

34. 다음 중 범죄예측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특성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객관성
② 임의성
③ 경제성
④ 단순성

35. 다음 중 코니쉬와 클락(Cornish & Clarke)이 제시한 상황적 범죄예방의 25가지 기법에 포함되지 <u>않은</u> 것은?
① 출구 검색
② 목표물 은닉
③ 조기 개입
④ 논쟁 피하기

36. 다음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④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37. 다음 중 전환처우(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한다.
②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가 크다.
③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사제도는 법원에 의한 다이버전이다.
④ 형사사법 통제망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38. 다음 레클리스(Reckless)의 봉쇄이론 중 내적 봉쇄의 구성요소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규범 중화
② 자아 개념
③ 목표 지향
④ 좌절 용인

39. 다음 중 엑크와 스펠만(Eck & Spelman)이 제시한 'SARA 모델'의 4단계 문제해결 과정에 포함되지 <u>않은</u> 것은?
① 조사(Screening)
② 접근(Access)
③ 대응(Response)
④ 평가(Assessment)

40. 다음 중 셔먼과 버크(Sherman & Berk, 1984)의 '미니애폴리스 가정폭력실험'이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려 한 것은?
① 처벌의 신뢰성 효과
② 처벌의 타당성 효과
③ 처벌의 엄격성 효과
④ 처벌의 지속성 효과

행정법

1. 다음 중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②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④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사전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할지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다음 중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
   ③ 국유재산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를 하는 것은 처분으로서 공법관계에 속한다.

3. 다음 중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내부업무 처리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서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④ 건축법상의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등의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 행정행위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볼 수 있다.

4. 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이나 예규가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령이 일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④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부산시내 종교시설의 이용자에게 특정기간 내에 대면예배를 금지한 부산광역시 고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③ 처분의 기준이 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별표1]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④ 「재산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장의 훈령이므로, 그 거래지정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

6. 다음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② 재량행위이더라도 수익적 행위에 부관을 붙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7. 다음 중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적법하였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부담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④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8. 다음 중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② 계고처분이 위법한 경우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이므로, 그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④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 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조세 부과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나중에 취소처분이 취소되어도 원 조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④ 행정행위의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10. 다음 중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③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④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

11.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미리 계약조건과 그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12. 다음 중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된다.

③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13.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만을 달리한 것이므로 일부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의 공개로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

④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며, 그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14.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부작위의무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은 무효이고, 원상복구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집행의 계고처분 역시 무효로 된다.

②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것이다.

③ 의무자가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행정청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대집행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④ 위법한 건물이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15. 다음 중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②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④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②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부과관청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7. 다음 중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서울특별시가 점유·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따라 보도 관리 등을 위임받은 관할 자치구청장 甲으로부터 도급받은 A주식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남은 자갈더미를 그대로 방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이곳을 지나가던 乙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서울특별시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하위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 귀속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8. 다음 중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으로 발생한 재해의 경우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일반공중이 사용하는 공공용물 외에 행정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물이나 하천과 같은 자연공물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에 포함된다.

③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 다음 중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보상금액뿐만 아니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까지도 정당하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구 「약사법」상 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은 「헌법」 제2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이 말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토지가 철새도래지로서 자연·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더라도 구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피수용자의 객관적인 재산가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20. 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의무이행재결 중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④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있어 편의를 제공하려는데 있으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

21. 다음 중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공법관계이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22. 다음 중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명부에 의한 승진심사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3. 다음 〈보기〉 중에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보 기 >

가. 수녀원에 소속된 수녀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에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처분에 대한 재단법인 수녀원의 원고적격

나.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이 도로의 용도폐지를 다툴 원고적격

다. 기존 약국개설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라.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의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① 가, 나, 다, 라
② 나, 라
③ 다, 라
④ 다

24. 다음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압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2항이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정하지 않는 것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상고심 계속중에 정년퇴직한 경우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④ 공무원의 근속승진임용은 근속승진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 성격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근속승진임용에서의 제외행위가 위법함을 다투기에 적합한 소송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25.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② 제3자의 소송참가
③ 행정청의 소송참가
④ 피고경정에 관한 규정

26.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에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③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④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27. 다음 중 취소소송의 일부취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도 위법한 부분에 대한 가분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하여야 한다.
②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③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은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④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중 일부 상이만 국가유공자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중 위 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대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8. 다음 중 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②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③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제2차 및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 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29. 다음 중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②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에서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된다.
③ 과세처분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④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주문에 포함된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30.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여, 과세관청이 후속처분을 한 경우에 재조사결정에 대한 조세불복절차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이 쟁송대상이므로 원래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날
②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절차에 따라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③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④ 재조사결정에 대한 조세불복절차의 청구일

31. 다음 중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의 대상이 행정심판의 재결인 경우에 재결의 대상인 처분의 취소소송은 재결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다.
② 처분취소소송에서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병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다.
③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까지 각하할 것은 아니다.
④ 무효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하여도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32. 다음 중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상수도보호구역의 지역주민에게는 상수도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③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에 건물·토지를 소유하는 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환경단체 등의 환경상의 이익에 대하여는 근거법률에 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33. 다음 중 행정조직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어떤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관 설치의 형식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

④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는 「정부조직법」에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

34. 다음 중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구「정부조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의 근거규정일 뿐,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35.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속하지 <u>않는</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

②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사무

③ 공립·사립학교의 장이 행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사무

④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제3항이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권한

36. 다음 중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

②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및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③ 지방계약직공무원의 보수의 삭감은 이를 당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처분의 일종인 감봉과 다를 바 없다.

④ 공무원 갑이 구「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국가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37. 다음 중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도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② 만일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에 있었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이 있기 전까지만 직위해제를 하여야 한다.

④ 제청신청인들이 구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부칙 제2호에 의하여 복직발령을 받았으나, 직위해제처분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직위해제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38. 다음 중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②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다.

③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구 「도시계획법」 또는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④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9.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는</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불심검문에서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한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정지시킨 장소에서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동행을 요구한 경우에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

< 보 기 >

갑교회는 파주시장에게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하자, 파주시장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하였다.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파주시장은 갑교회에게 이 사건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이다.

③ 납골당 설치장소로부터 500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④ 납골당 설치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할 것이다.

행정학

1. 정치행정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등장했다.
   ② 정치행정이원론을 대표하는 디목(Dimock)은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③ 행정을 국가의사를 집행하는 기술적 과정으로 파악했다.
   ④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는 공사행정일원론의 입장이다.

2. 비정부조직(NG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수자의 의사가 지나치게 과잉 대표되는 대표성 저하의 문제를 야기한다.
   ② 도덕성 및 전문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
   ③ 자발성, 자유성, 이익의 배분성, 공익성 등이 특징이다.
   ④ 대중적 풀뿌리 조직, 지역공동체, 자조적 기관 등을 의미한다.

3.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 여부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에 해당되는 사례로 가장 옳은 것은?

구분		배제성 여부	
		비배제성	배제성
경합성 여부	비경합성	㉠	㉡
	경합성	㉢	㉣

   ① 고속도로, 케이블 TV
   ② 등대, 일기예보, 치안
   ③ 전기, 통신, 상하수도
   ④ 공동목초지, 공공낚시터, 해저광물

4.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의 실체설은 집단이익을 중시하는 전체주의적 입장이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신생국가에 적용이 곤란하다.
   ③ 공익의 실체설은 엘리트 모형과 유사하다.
   ④ 롤스(Ralws)와 칸트(Kant)는 공익의 과정설을 주장하였다.

5. 다음은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객정치는 규제의 유지를 위해 적극적 로비가 시도된다.
   ② 기업가적 정치는 일반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시적 절연이 발생한다.
   ③ 대중정치는 양측 모두 체계적인 조직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④ 이익집단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된다.

6. 시장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분배의 불공정성은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② 민영화 및 민간위탁은 시장실패의 대응 방안이다.
   ③ 독과점 현상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④ 정부는 시장개입 및 규제를 통해 시장실패를 교정한다.

7.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의 분석수준은 조직간 문제에 중점을 둔다.
   ② 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가 대표적 학자이다.
   ③ 1970년대 석유파동과 복지국가의 위기로 등장하였다.
   ④ 정부기능의 대폭적인 감축과 민영화를 추구한다.

8. 가외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외성은 능률성과 대치되며, 중복으로 인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가외적인 장치와 상호작용으로 창조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가외성은 수단적 가치보다 본질적 가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④ 중첩성은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할되어 있지 않고 협력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9. 다음은 기계적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명한 책임관계
② 적은 규칙과 절차
③ 계층제, 낮은 팀워크
④ 성과 측정이 가능

10. 조직구조에 있어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구조는 부서 간의 조정과 협력이 어려워 환경변화에 둔감하다.
② 기능구조는 전문성 제고와 규모의 경제 구현이라는 장점이 있다.
③ 사업구조는 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④ 기능구조는 고위관리자에게 업무가 집중된다.

11.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960년대 정책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과 행정행태론이 가진 약점이 결합되어 비롯되었다.
② 정책학은 가치중립적인 학문으로 객관적 성격이 강하다.
③ 1951년 라스웰(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에서 정책학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④ 드로어(Dror)는 묵시적 지식과 초합리성을 중시하며, 정책의 비합리적 과정을 인정한다.

12. 정책의제설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정치체제에서 주로 발생한다.
② 내부접근형은 최고 통치자나 고위정책결정자가 주도 세력이다.
③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이 취약한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④ 공고화모형은 이미 광범위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13. 무의사결정이론(Non Decision Mak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엘리트의 이익과 가치에 대한 도전을 억누르고 사멸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②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엘리트주의라 불린다.
③ 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강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④ 무의사결정이론은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만 나타난다.

14. 정책네트워크 유형 중 하위정부(Sub-Government)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에서 논의된 개념으로 다원주의와 엘리트 이론의 절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② 하위정부(Sub-Government)는 의회 위원회, 이익집단, 정부관료가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③ 상대적으로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협상을 진행한다.
④ 주로 대통령의 관심이 많고, 공적재원으로 집행되는 규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15.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엘리트이론에서 엘리트들은 자율적이고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다원주의에서는 정책영역별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다르다.
③ 헌터(Hunter)는 전국적 차원의 지위접근법을 사용하여 엘리트들을 분석한다.
④ 고전적 엘리트이론에서 엘리트들은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다.

16. 정책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공식적 참여자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공식적 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② 정당은 공식적 참여자로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되어 정책과정에 참여한다.
③ 국회는 공식적 참여자로 국민들의 위임권을 받아 행정부를 견제하며 평가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공식적 참여자로 위헌심사를 통해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17.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총체주의 예산제도이다.
② 기획의 책임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하향식 예산이다.
③ 사업별로 예산이 책정되므로 입법부가 사업별로 예산을 심의하기가 용이하다.
④ 계량적인 기법인 비용편익분석, 체제분석 등의 분석적 기법을 활용한다.

18.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쓰레기통 모형은 의사결정의 네 가지 요소로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의 흐름을 제시한다.
②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정보와 환류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한다고 가정한다.
③ 에치오니(A. W. Etzioni)의 혼합탐색모형은 근본적 결정에서 중요한 결과만 개략적으로 예측하고 부분적 결정에서 세밀한 분석을 한다.
④ 만족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한 후 결과를 도출한다.

19.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 간의 관계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집행자가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공식적 정책결정자를 설득 또는 강제 ㉡ 정책집행자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와 협상 ㉢ 정책집행자는 자신이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필요한 능력 보유

① 지시적 위임자형
② 관료적 기업가형
③ 협상가형
④ 재량적 실험가형

20. 베버(Weber)의 관료제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직위의 권한과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된다.
② 주관적 요소가 영향을 주지 않는 비개인성 또는 비정의성을 요구한다.
③ 세세하고 번잡한 규칙에 따른 비능률을 발생시키는 동조과잉이 나타난다.
④ 고정적인 보수와 연금을 받고, 근무연한에 따라 승진한다.

21. 조직구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 -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여 지휘와 명령복종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② 조정의 원리 -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집단노력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하는 것이다.
③ 통솔범위의 원리 - 한 사람이 직접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이다.
④ 부성화의 원리 - 직무를 성질별로 나누어 한 사람에게 한가지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다.

22. 애드호크라시(Adhocracy)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독의 필요성이 높지 않아 수직적 분화가 아주 낮다.
② 최근 전통적 관료제 조직구조를 대체할 정도로 많이 활용된다.
③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표준화가 부적합하다.
④ 지위에 따른 권위가 아닌 전문지식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23. 변혁적 리더십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
② 부하들을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도록 고무하며, 스스로 문제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한다.
③ 조건적 보상과 예외에 의한 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④ 리더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부하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

24.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섯가지 기본적 욕구는 우선순위의 계층을 이룬다.
② 하위계층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
③ 인간의 욕구 계층은 모두 동일하고 고정되었다고 본다.
④ 욕구발로의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고 있다.

25.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대감은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다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다.
② 수단성은 성과와 보상 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다.
③ 공평성은 자신의 투입, 산출과 준거인물의 투입, 산출을 비교하면서 발생하는 인식이다.
④ 유의성은 보상에 대한 선호의 강도를 의미한다.

26.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는 관료들의 정치적 대응성을 높인다.
②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③ 엽관주의는 행정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
④ 엽관주의는 공무원들의 높은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27.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관료제의 민주적 대표성 및 대응성을 강화한다.
② 실적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③ 출신 집단의 이익과 가치가 반드시 대변되지 않는 한계점이 있다.
④ 수평적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한다.

28.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안정성, 일관성, 계속성 유지에 긍정적인 제도이다.
② 내부승진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
③ 공직 분위기가 침체되어 공무원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④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여 교육훈련과 경력발전에 관심을 둔다.

29. 계급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 확립과 신분보장, 일체감 형성에 용이하다.
②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옹호하는 특권집단화의 가능성이 있다.
③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결여된다.
④ 신분, 학력, 자격 등 사람 중심의 분류제도이다.

30.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범정부적 통합적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이상 일반직, 별정직, 경찰, 소방, 외무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③ 직위운영은 개방형 직위 20%, 공모직위 30%, 부처자율직위 50%이다.
④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31.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헌법」상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헌법」상 국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국회법」상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국회법」상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을 심의한다.

32. 우리나라 공무원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③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④ 국회 수석전문위원, 비서관, 비서 등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33. 공무원 교육훈련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모의연습은 실제 조직상황에서 업무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② 감수성 훈련은 대인 간 정서적 접촉과 인간관계 개선의 장점이 있다.
③ 액션러닝은 소규모 팀을 구성해 개인 또는 조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
④ 직장내훈련(OJT)은 실제직무를 수행하면서 감독자로부터 직무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34. 행정통제의 유형 중 비공식·내부통제유형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에 의한 통제
② 정당에 의한 통제
③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
④ 입법부, 사법부에 의한 통제

35. 부패원인의 접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도덕적 접근방법은 부패원인을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문제로 보는 접근법이다.
② 제도적 접근방법은 부패원인을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 미숙으로 보는 접근법이다.
③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법 집행 단계에서의 영향력 행사 등 사회 내의 권력관계로 보는 접근법이다.
④ 사회문화적 접근방법은 부패원인을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 사회문화적 환경의 결과로 보는 접근법이다.

36.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국민과 행정기관과의 분쟁을 조정·중재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②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처음 상설된 제도이다.
③ 신속한 처리와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다.
④ 고충처리의 경우 행정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다.

37.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3개월 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8. 티부(Tiebout)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지방정부 간 공공서비스로 인한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가 없어야 한다.
③ 지방정부의 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지역프로그램의 혜택은 그 지역주민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9. 다음 중 예산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통일성의 원칙은 특정한 수입과 특정한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② 명확성의 원칙은 예산의 결산이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는 원칙이다.
③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은 주어진 목적, 규모, 시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완전성의 원칙은 예산총계주의로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명시적으로 나열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40. 중앙인사기관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① 독립합의형은 합의제 구성원의 임명시기를 서로 다르게 하여 인사행정의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다.
② 1999년 설치된 중앙인사위원회는 비독립 단독형이다.
③ 독립합의형은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인사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따른 실적제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
④ 비독립단독형은 인사행정의 엽관화 및 정실화를 막기 어렵다.